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방안



권미경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에서 육아와 관련된 문화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돼 저출산 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된다. 육아하는 가족이 체감하는 육아문화는 부정적 요소들이 많고, 특히 가족의 생활공간인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적 경험은 육아하는 부모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노키즈 존(No Kids Zone), 맘충, 독박육아 등의 단어는 육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회 안에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는 육아하는 가족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육아정책, 특히 지역사회 안에서 지지적인 지원정책, 제도들은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인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상담 등 다면적인 양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육아하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 특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 특히 지역사회 안에 형성된 육아문화의 양상을 진단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줄여가는 노력을 통해 육아하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 인정, 더 나아가 존중하는 문화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사회에서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육아친화적 지역환경(공원/놀이터/도서관) 조성, 농어촌지역 양육지원 특화,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형성 지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와 관련해 정부, 지자체, 기업, 미디어 등을 통한 육아존중문화 개선 홍보를 제안한다.

육아문화를 홍보로 바꿀 수 있는가? 홍보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문화의 개선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접근이 요구된다.

육아지원이 사회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도 여전히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홍보 캠페인으로 독려하고 있다.

정부 수준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경우 ‘같이하는 육아, 함께하는 육아, 가치 있는 행복육아’ 주제로 육아문화 정착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부터 실속육아, 작은 육아를 포함하는 육아문화 조성에 노력하면서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안내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도 필요하다.

각종 육아지원 제도가 있어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서비스 인프라가 구비돼 있어도 그 활용이 저조한 것이 문제다.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육아 정보를 부모들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하고, 육아 고민을 공감하면서 부모의 역량과 효능감을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리동네 보육반장’ 제도와 유사한 다른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부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대 및 내실화도 요구된다.부모들은 정부의 육아지원 전달체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실제 활용은 저조하였다. 다만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 정부의 육아지원 전달체계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021년 10월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구 센터까지 포함하여 123개소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7개가 운영 중인데 이는 전국 분포임을 고려할 때 접근성이 떨어짐은 분명하다.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센터 확대가 부담이라면 인력의 보강을 통해 분소의 형태로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활용이 저조한 이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센터마다 원인을 파악한 후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육아친화적 지역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양육자들은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아이 기르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의 영아를 위해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영아가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영아전용 놀이터’ 등의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 양육지원을 특화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농어촌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양육환경은 보육교육 기관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기관과 거리가 멀고 육아지원 전달체계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며, 소아과병원과 응급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농어촌에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농어촌에서 영유아 양육가정이 어려운 환경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의료시설 부족으로, 특히 소아전문병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공중보건의를 소아과 또는 가정의학 전공 의사로 농어촌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방법, 소아과병원을 읍지역에 개원할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으로 개원을 활성화하는 방안, 혹은 건물 대여비용에 대한 대출 등 금전적 지원 환경을 제공하여 개원을 장려하는 방안, 지역 보건소 또는

공공 네트워크로 담당 의료인과 연결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주말 등 필요시 의료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또 지역사회 내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반영해 농어촌에서 이미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내 도서관을 중심으로 '농어촌형 영유아 문화센터'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부모들은 지역 및 동네에서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 육아모임이 활성화되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 육아공동체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지자체 내의 공공장소를 활용하여 육아하는 가정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 공동 활동 공간인 '육아정(育兒亭)' 설치 등 노인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육아를 위한 마을 내 공간을 구성하는 것도 좋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방문하여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부모끼리 육아정보 교환이 가능한 공간으로 육아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육아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지는 공간이다.

지역사회 내 기관 간 연계한 육아문화 조성도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중심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처럼 '육아친화상점' '아동친화식당' '육아친화노래방' 등의 인증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화장실에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아동 맞춤 세면대나 변기가 있으며, 유모차 파킹 공간이 있는 등 아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되는 곳은 지자체에서 영업장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출처:베이비타임즈 기고_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업무 자동화로 조직 혁신 이끈다

- 내수면 어업 현황 조사 자동화 실증 지원 -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부처 내 업무 자동화(RPA*)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업무 자동화(RPA) 활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업무 자동화(RPA)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작 7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 Robotic Process Automation : 인간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하고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
- 최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업무 자동화(RPA)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에서도 집행업무를 중심으로 업무 자동화(RPA)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 *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8개 과제에 RPA를 도입했으며, 우정사업본부(14개), 조달청(9개), 국가보훈처(9개), 농림부(9개) 등 집행업무를 중심으로 운영 중 ('21년 기준)
-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무 자동화(RPA)에 적합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발굴하고, 아이디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업무 자동화(RPA)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실증 대상 아이디어 1건, 최우수 아이디어 2건 등 총 7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 이 중 실증 대상 아이디어로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제출한 ‘내수면 어업 현황조사 자동화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매월 시·군·구에서 작성한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 신고 현황을 시·도를 통해 취합하여 각종 내수면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자료 정리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각 단계별로 직접 지자체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료를 입력하고 확인하여야 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 이에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는 현황 취합단계에 업무자동화(RPA)를 적용해 자료를 쉽게 취합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다른 아이디어와 달리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지자체와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해양수산부 차원의 실증 추진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 또한, 최우수 아이디어로는 인천항만공사 항만뉴딜사업실이 제안한 ‘주간 컨테이너 예상물동량 대시보드’와 한국해양진흥공사 재무회계부가 제안한 ‘사내 주간 금융시장 동향 대시보드 구축’이 선정되었다.
- ‘주간 컨테이너 예상 물동량 대시보드 구축’은 터미널 운영사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선석 배정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향후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업무 내용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 자동화(RPA)에 적합하고, 앞으로 다른 항만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사내 주간 금융시장 동향 대시보드 구축’은 금리, 채권, 주가, 환율 등 해외 금융시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가공하여 시각화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앞선 ‘주간 컨테이너 예상 물동량 대시보드 구축’과 같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 성격과 건화물지수, 컨테이너 지수 같은 해운 관련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그 외에도 우수아이디어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에서 제출한 ‘해양수산 기술개발(R&D) 성과관리·분석체계 도입’, 울산항만공사 디지털 플랫폼사업단이 제출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내·외항선 입·출항 수리처리 자동화’와 ‘정기 공지사항 발송 자동화’, 인천항만공사 물류사업실이 제출한 ‘항만시설사용 및 고지업무 자동화’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 오영록 과장은 “아직까지 업무자동화(RPA)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자동화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정기적으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 자동화(RPA)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 향한 여정 시작됐다

- 5일(금) 8시 8분 발사 ... 첫 교신 완료, 지구 벗어나 목표 궤도 진입 성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달 궤도선 ‘다누리’가 8월 5일(금) 8시 8분 48초(현지기준 8월 4일(목) 19시 8분 48초)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었으며, 14시 현재 달 전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다누리는 8시 48분 경 고도 약 703km 지점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콘9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었고, 발사 약 92분 후인 9시 40분경에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하였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항우연 내에 있는 다누리 관제실에서 스페이스X사로부터 받은 발사체 분리정보(분리

속력 및 분리 방향 등)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누리가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한 궤도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였다.

- 또한 수신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누리의 태양전지판이 전개되어 전력생산을 시작하였고, 탑재컴퓨터를 포함한 장치들 간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범위 내에 위치하는 등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향후 다누리는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과 지구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이동하다가, 9월 2일 경 추력기를 작동하여 방향을 조정할 예정이다.

□ 다누리는 약 4.5개월의 항행 기간을 거쳐 '22년 12월 중순 달에 도착한 후 12월 말까지 달 임무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 이후 '23년 1월부터 달 상공 100km의 원궤도를 돌며 1년여 간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 과학연구(표면광물 분석, 자기장·방사선 관측 등),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

□ 다누리는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이다.

- 다누리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심우주 항행에 필요한 탄도형 달 전이방식(BLT)의 궤도운영능력을 확보하고 대용량 고추력 추진시스템을 국산화하였으며, 심우주 통신에 필수적인 직경 35m의 대형 심우주 통신용 안테나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우주탐사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또한 다누리에는 6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는데 미 항공우주청(NASA) 탑재체(새도우캠)를 제외한 5개의 과학탑재체는 국내의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직접 개발하였다.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희대

□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다누리는 우리나라가 처음 제작한 달 궤도선으로 누리호 개발과 더불어 우주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다누리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다누리의 임무 운영을 통해 얻은 과학 데이터는 향후 우리나라의 달 과학 연구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매력적인 한국문화 소식, 인도네시아어로도 알린다

- 8. 8.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시작, 총 10개 언어로 확대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명순, 이하 해문홍(KOCIS))은 한류 열기가 높고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류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 인도네시아어 서비스(indonesian.korea.net)를 시작한다.

□ 이에 따라 해문홍이 운영하는 '코리아넷'이 제공하는 언어는 기존 9개(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베트남어)에서 10개로 확대된다.

□ 우리 역사, 문화예술, 관광지, 재외 한국문화원 소식, 주요 정책 등 소개

□ '코리아넷' 인도네시아어 페이지는 한국 관련 뉴스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이 보내오는 소식을 볼 수 있는 '뉴스 포커스', 우리 역사를 비롯해 문화예술 · 관광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한국에 대하여',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전시회 등 행사를 알려주는 '이벤트', 대통령 국정 활동과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정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앞으로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한국 관련 주요 뉴스는 물론이고 한국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관련 소식, 인도네시아에서 화제가 되는 한국 관련 뉴스도 인도네시아어로 알린다.

□ 한류 확산의 중심지 인도네시아, 한류소비점유율과 코리아넷 명예기자 선발 수 높아

□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 ASEAN) 인구의 41%,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차지하는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한류 확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5월 26일 발간한 '2021 한류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한류소비점유율*은 23.17%로, 한류 인기가 많은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18개국 중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26.71%) 다음으로 높았다. 또한 올해 선발된 코리아넷 12기 명예기자단 122개국, 4,834명 중 인도네시아 명예기자는 403명으로 이집트(640명), 멕시코(42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 한류소비점유율은 한류콘텐츠 이용 다양성과 평균소비 비중을 결합해 만든 지수로, 각 국가의 전반적 한류소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와 20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8일(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현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다. 지난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규모(수출액 +수입액)는 192억 7,500만 달러(약 25조 2,600억 원)로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교역 상대국 중에서 무역 규모로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 해운홍 박명순 원장은 “‘코리아넷’ 인도네시아어 사이트가 한국 문화를 인도네시아에 알리고 두 나라 국민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조직 구조 개선

 **도 일 환**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1. 문제제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0.12.9. 국회를 통과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1.13.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게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
-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에게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조직의 구조적 문제, 법적·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승진, 인사 순환의 폭 등의 한계로 의회근무 기피현상 발생
- 중앙정부는 지방의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하위법령 개정 등에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자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2. 현실과 문제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에 불부합하는 인사권 수행
 - 의회 조작권 및 기준인건비 등이 부여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경직된 지방의회 기구 설치
 - 지방의회 사무기준, 직급기준 설치 신설(97.2.4 시행) 이래 직급체계 고정
 - 행정수요 급증 및 예산 규모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조직 대폭 확대

• 기초의회 의원정수 및 사무기구 직급기준 현황

합계/	의원정수 10명 미만, 인구 10만 명 미만	의원정수 10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상	인구 100만 명 이상
226의회	91의회	131의회	4의회
의회최고직급	사무과장 (5급)	사무국장 (4급)	사무국장 (3급)
문제점	사무국장없음	사무과장없음	1담당관 있음

출처: 협의회 내부자료

• 지방의회 조직의 운영상 문제점

구분	광역의회	기초의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처장(1급) 아래 상위 직급(2~3급)부재로 인해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의 효율성 저하 • 대통령에 의해 사무기구 내 상위 직급설치 불가로 4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경로가 막혀 인사적체·사기 저하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정수 10명 이상 기초의회는 사무국장(4급)의 하부조직에 5급 과장(담당관)설치 불가로 중간관리자가 없음 • 의원정수 10명 미만인 기초의회는 국장 없는 의회사무과장(5급) 단위의 조직만 설치 가능

출처: 협의회 내부자료

- 지방의회 인사 방령 현황
 - 인사권 독립 이후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인사발령 대상 4,158명 중 의장이 직접 인사발령을 낸 직원 수는 2,921명(70.3%)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사협약을 통한 원대복귀 조건부 인사교류(파견)는 1,237명(29.7%)로 나타남

●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발령 현황

(2022.6.30. 기준, 단위: 명)

	계	4급 이상	5급	6급이하	비고
계	4,158	114	531	3,513	
임용	2,921(70.3%)	75	316	2,530	
파견	1,237(29.7%)	39	215	983	

출처: 협의회 내부자료

* 실제 의회 소속 공무원 속기사,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하면 파견 비율이 더 높을 것임

3. 법제도의 문제점

1) 조례 위임사항 제한 제도

- 지방자치법 제 2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
-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범위를 제한하는 하위 법령 금지에 관한 적용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2) 지방의회 조직권 부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 3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조직권 부여

3) 지방의회 규칙 제정권 제한 문제

- 같은 법 영 제15조 제4항 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배치되는 법령 미비사항 발생

4) 기준인건비 통합 운영의 문제

- 같은 법 영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를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여함

5) 전문위원 직급의 문제

-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기초의회의 경우 5급, 6급으로 차등하여 복수 직급으로 운영

4. 개선방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구조적 문제와 법적 제도적 문제 해결이 선행 되어야함

1) 지방의회 조직·직급체계 개선

- 법률의 개정이 필요없는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 개정
※ 관련규정 제4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4> 및 <별표 5>
- 시·도의회 사무처에 상위 직급(2급 및 3급) 설치 허용

- 인구 50만 명 기초의회의 이원화가 된 조직 구조(사무국,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일원화 및 2담당관 신설(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
- 인구 50만 명 이상 특례시 및 자치구 의회 사무국장 직급 상향(4급→3급) 및 3담당관 신설(총무담당관, 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

2) 법제도의 개선

- ① 조례 위임사항 제한제도 개선(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삭제 등)
-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 부여
 - 규정 제36조 2항 하단에 의회조직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③ 지방의회 규칙 제정권 제한 정비(규정 제15조 제4항)
- ④ 지방의회의 독립된 기준인건비 신설(규정 제4조)
 - 지방의회가 사무기구와 직원의 직급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된 기준인건비 신설
- ⑤ 전문위원 직급 상향 및 정수 개정(규정 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5」)
 - 기초의회 전문위원 직급 5·6급 복수 운영→5급 동일직급으로 일원화
 - 전문위원 정수를 지방의회에 설치된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정하도록 조례 위임(예산결산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출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_도일환 사무처장

알기쉬운 정책용어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

전자여행허가제 (K-ETA)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알기쉬운 정책용어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 관광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

기대효과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예방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 예방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